

# ‘제식구 감싸기’에 뿔난 여론… 경실련도 조국사퇴 요구

청와대 선임행정관 페이스북에  
검찰 향해 ‘제버릇 개주나’ 비난

네티즌 “격 떨어져, 靑부터 개혁”  
한국당 “青 스스로 중립 어긴 것”  
경실련 “의혹 해소 안돼” 반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뉴스

검찰이 ‘동양대학교 총장상 위조 혐의’로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를 지난 6일 전격 기소한 가운데, 청와대 일부 인사들의 정 교수 감싸기가 여론의 불편함을 유발한 모양새다. 청와대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 교수의 해명글을 대신 올리거나, ▲검찰을 향해 ‘날뛰는 늑대들’이라고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현직 인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아무리 개인 SNS라고 해도 솔한 뒷말을 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를 지낸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지난 7일 밤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와 연관된 SB S 방송사의 보도 해명글을 게재했다. SBS는 검찰이 정 교수로부터 임의제 출형식으로 입수한 ‘정 교수 동양대 P C’에서 총장 도장 및 직인을 컴퓨터 파

일로 만들어 저장했음’을 보도했다. 김 비서관이 올린 정 교수 글은 SBS의 이력한 보도를 해명하는 글이다.

청와대 내 대통령비서실장실 소속 조모 선임행정관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춤사위에 언론들도 휘모리 장단으로 합을 맞춘다. 검찰 개혁이 싫다는 속내는 애써 감춘다”며 “제버릇 개주나. 그냥 검찰왕국을 만들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한다”고 했다. 조 선임행정관의 이러한 글의 제목은 ‘검란’(檢亂)이고, 검란은 ‘검찰이 일으키는 난’을 뜻한다.

청와대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조 후보자 감싸기에 여론은 분노했다. 일부 여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이 있더니 문재인 대통령에겐 조국이

있었다. 바지사장 2연타는 아니지 않나(네이버뉴스, mi\*\*\*)”, “이정도면 조국게이트다. 특별검사제를 실시해야 한다(네이버뉴스, gh\*\*\*)”, “조국 부인 옹호 역할도 스스로 없이 하다니 청와대 격 떨어진다. 사법개혁 전 청와대 개혁부터 해야 한다(네이버뉴스, pj\*\*\*)”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야권에서도 여론과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가 논란이 된 조 후보자 부인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고,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것은 ‘청와대 스스로 중립’을 어긴 것 아닌가. 이는 문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와도 궤를 달리한다”고 꼬집었다. 윤 부

대변인이 말한 문 대통령 취임사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권리기관도 무소불위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는 대목이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진해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회견과 지난 6일 청문회 등 2번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밀끔하게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경실련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다.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진퇴와 무관하게 더 강력한 검찰 개혁과 교육개혁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정책브리핑

### 해수부

‘가을에 걷기 좋은 섬’ 선정

해양수산부는 ‘가을에 걷기 좋은 섬’ 9곳을 선정해 8일 소개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풍도에는 섬 곳곳에 야생화가 피어 있고, 선착장에서 해안 산책로까지 돌레길이 조성돼 있다.

인천 용진군의 덕적도에는 자전거 길이 만들어져 있어 자전거를 타거나, 울창한 숲 사이로 걸으며 산림욕을 할 수 있다. 충남 보령시의 장고도는 기암괴석과 백사 청송이 어우러져 해안 경관이 뛰어나며, 전북 부안군 위도는 그 곳에서만 자생하는 흰색 상사화 군락지를 배경으로 도보여행을 할 수 있다.

꼬막과 뺨배가 유명한 전남 보성군의 장도, 자연경관이 빼어난 해안길이 있는 전남 여수시의 개도, 울창한 숲이 우거진 경남 통영시 학림도, 다양한 나무를 볼 수 있는 경남 통영시 비진도, 축제와 절경을 함께 즐기는 제주시 추자도 등도 추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석대성 기자

### 농식품부

美·佛·日·베트남 등서  
‘코리아 김치페스티벌’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전통 김장 문화를 계승하고 김치의 우수성을 국외에 홍보하기 위해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한국의 ‘김장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행사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농식품부는 김치 주요 수출국과 식문화 전파 영향력이 큰 미국, 프랑스, 일본, 베트남, 한국 5개국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이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다음 달 19일 프랑스 파리, 다음 달 25~27일 베트남 하노이, 11월 10일 일본 도쿄, 11월 15~16일 서울에서 각각 열린다. /석대성 기자

### 해수부

세계수산대학 석사과정 모집

해양수산부는 ‘세계수산대학 공동 시범사업’ 석사학위 과정생 30명을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9일부터 부경대 홈페이지와 공동시범사업 전용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과 안내 사항을 게재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국은 194개 회원국에 이를 알린다.

해수부와 FAO는 올해 5월 ‘세계수산대학 공동 시범사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6월 열린 양 기관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올해 12월까지 학생을 선발한 후 내년 3월부터 석사학위 과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석사학위 과정 지원자는 학습 계획서, 학사학위 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부경대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미중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 유명무실 ‘일하는 국회법’… 지난달 이행률 8% 불과

교육위·한노위 단 2곳만 법안 이행  
이행률 저조…처벌 규정없어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오른쪽)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하는 국회법’ 도입 세 달이 지났지만, 여야의 법안 심사·처리는 갈수록 저조한 모양새다. 8월 한 달간 2회 이상 법안 심사에 나선 소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단 두 곳에 불과했다.

8일 메트로신문이 지난달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 중 ‘일하는 국회법’을 이행한 곳은 교육위 1곳에 불과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0대 후반기 국회 의장으로 취임한 직후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각 상임위 법안심

사소위를 매월 2회 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한다.

지난달 두 번 이상 전체회의를 가동한 소위원회는 단 두 곳, 상임위 내 법안심

사 관련 소위가 총 25곳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행률이 8%에 그친다.

특히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

원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11곳의 법안소위는 지난달 단 한 차례도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앞서 7월에도 전체 중 36%만 국회법을 이행했다. 국회법을 시행한 6월에도 규정을 준수한 소위는 전체 3분의 1에 불과했다.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앞으로도 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또 당마다 기조와 입장이 달라 법안 심사 개회 합의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여야는 추석 명절 후 오는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로 꼽으면서 9월 법안 심사는 진전이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산업부, 대학생 ‘통상대책 논문대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무역분쟁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제3회 통상정책 토론·논문대회’ 예선과 논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 참가를 원하는 대학생은 예선 논제에 대한 소논문을 오는 9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예선 논제는 ‘미중무역분쟁 경쟁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선택: 안미경증(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은 유효한가’이다.

최대 3인 1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재학생, 휴학생 모두 가능하다. 전공과 내외국인 여부는 상관없다.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이 사전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32개팀을 선정하고 심사 결과는 10월 14일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9월 27일까지 신청한 후 9월 16~10월 14일까지 A4 30매 이내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석대성 기자

## 한경연 “올 韓 경제성장률 1%대”

대외여건 악화 따른 투자·소비 둔화

올해 경제성장률이 1%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KERI 경제 동향과 전망 : 2019년 3/4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9%로 예상된다. 종전 보다 0.3%포인트 줄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0.8% 포인트나 적다.

미중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급격한 위축을 보이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건설투자는 정부 부동산 억제 정책과 추가 규제로 둔화폭이 -4.5%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도 전망치를 0.4% 포인트 줄여 1.9% 성장으로 내다봤다. 명목임금 상장률이 크게 감소한데다가 소비심리 악화,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이 이유로 들어졌다. /김재웅 기자 juk@

/석대성 기자